조선업 경기침체 여파 목포 6000명·영암 3400명 급감

■위기의 고용위기지역…전국 8개 시군구 최근 3년새 인구 4만명 줄어

울산 동구 1만명·거제 5000여명 줄어

정부 실질 대책 마련 인구감소 막아야

조선업 위기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개 기초단체 인구가 지난 3년간 무려 4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와 영암 지역에서만 이 기간 1만명 가까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조선업 위기 등을 사유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개 시·군·구 인구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8개 기초단체는 목포시, 영암군,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로 조선소가 몰려 있는 이들 지역은 인구가 대부분 감소했다.

조선업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인구 추이를 보면 목포는 2015년 23만 8382명에서 2016년 23만 7739명, 2017년 23만 4379명, 2018년 23만 2327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3년간 6055명이 줄었다.

영암은 지난 2015년 23만 8382명에서 2016년 5만 8137명, 2017년 5만 5616명, 2018년 5만 4731명으로 3년간 3406명 감소했다. 조선업 불황이 시작된 이후 3년간 목포와 영암에서만 9461명이 줄어든 것이다.

전남에는 대형조선소 1개(현대삼호중공업), 중형조선소 7개, 소형조선소 63개(고깃배 등 소형선박 건조), 조선기자재 업체 209곳을 포함해 모두 280개 업체가 있다. 이 가운데 220개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가 영암과 목포에 몰려 있다.

■고용위기지역 인구 추이 〈자료:통계청, 단위:명〉

	2015(a)	2018(b)	(b)-(a)
목포시	238,382	232,327	-6,055
영암	58,137	54,731	-3,406
군산시	278,398	272,645	-5,753
울산동구	174,963	164,642	-10,321
거제시	255,828	250,516	-5,312
통영시	139,168	133,720	-5,448
경남고성	55,284	53,243	-2,041
창원 진해구	185,733	193,376	7,673
합계	1,434,559	1,389,161	-30,663

같은 기간 울산 동구는 1만 321명, 경남 거제시는 5312명이 줄었다. 8곳의 조선업 고용위기 지역 가운데 인구가 줄어든 지역 7곳에서 지난 3년간 줄어든 인구의 합은 3만 8336명이었다.

다만 창원 진해구만 인구가 7643명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진해구 남문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은 조선업 위기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대책이 위기의 강도해 비할 때 주민들이 실감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못한다"며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인구 감소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농정틀 과감히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자"…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추 후보자는 1995년 정계에 입문,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헌정사 처음으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이 됐다. 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추 후보자에 대해 "여성·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입법·의정 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및 모니터링 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특히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돼 이날 중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접수 20일째인 이달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靑, 차기총리 정세균 검증…李총리 유임설도 부상

丁 "지역구 종로서 열심히 뛰고 있다"

문 대통령, 李총리 유임 포함 고민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히 이날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후임총리 지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당분간 이 총리가 직을 유지하는 방안도 여권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유력 후보로 꼽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진보진영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총리 인선 기류에 큰 변화가 생긴 셈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굳어지는 듯했던 '김진표 총리 카드'의 경우 최근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이 불거지며 사실상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자신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대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측에 사실상 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 중에서도 정 전 의장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장의 경우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은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할 만큼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고 있어 집권 중반기 '경제총리' 콘셉트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나온다. 다만 정 전 의장의 의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총리설에 대한 질문에 "지역구인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며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전 의장이 청와대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만 보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신 이제부터 검증을 시작할 경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결국 내주 혹은 연말까지 후임 총리 인선 문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 총리의 유임 가능성까지 포함해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靑 '국민과 대화' 참가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서

"내년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확대"

"대형마트 불공정 행위 무관용 대처"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국민 300명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별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는 방송 당시 현장 참여 국민 300명 가운데 질문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 개별 질문을 제출하면 서신으로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300명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 주택·의료·복지 분야 56건, 주 52시간제 등 노동·일자리 분야 내용이 53건, 대입·정시확대 등 교육 분야 내용이 4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부 질의와 답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례로 '노인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2만명에서 내년 3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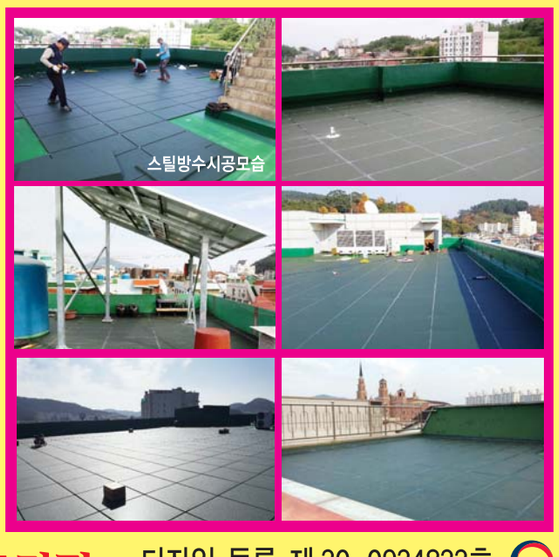
'장병 처우 개선이 군을 약하게 만든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병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군이 약해지지 않는다. 강한 군대는 압박이 아닌 자율과 창의로 완성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더 나은 복지정책이 적용되면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군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병사들을 믿고 사회에서 누린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추진계획 및 스트레스·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주기 단축 등의 계획도 전했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관련 질문에는 "국민과의 대화 직후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사상 최대 과징금인 411억원을 부과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혼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대출 상품 신설되며,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1인 가구에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발송한 답변 내용을 주제별로 재분류해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